

시론



주 정 민
전남대 대학원장

요코하마는 약 370만 명이 거주하는 일본 제2의 도시로, 도쿄 중심부에서 남서쪽으로 30km 떨어져 있다. 일본철도(JR)를 이용하면 30분 만에 도달할 수 있어 도쿄와 같은 생활권에 속한다. 한때 번영을 누렸던 요코하마는 2019년을 기점으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기업들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역 경제가 쇠퇴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일본의 고도성장기에는 요코하마가 도쿄 인근의 공업항으로 급속히 발전했다. 전국에서 노동 인구가 몰려들었고, 도쿄의 베드타운이자 국제도시로서의 역할도 수행했다. 당시 요코하마는 도시 팽창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일본은 1990년대 들어 부동산과 주식 버블이 붕괴하면서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라는 복합 위기에 직면했다. 요코하마 역시 이러한 변화의 영향을 피할 수 없었다.

특히 2019년을 기점으로 요코하마의 인구는 감소세로 전환됐다.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생산가능인구가 줄었고, 기업들은 인력 부족 문제를 심각하게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와 대학의 협력 모델, 요코하마

지역 경제의 활력도 점차 약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생동감 있던 상점가와 주거지역도 점차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모색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COC(Center of Community) 사업이다. 이 사업은 대학의 교육 및 연구 역량을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취지로 도입된 정책이다. 요코하마시와 요코하마대학도 이 사업에 적극 참여했다.

요코하마대학은 '지역공헌센터'를 설치하고, 매년 100개가 넘는 강좌를 개설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개강좌, 전문 심포지엄, 포럼 등을 통해 지역 문제를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더 나아가 요코하마대학은 낙후된 지역에 '위성 거점'을 설치해 지역 재생 실험도 병행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나미끼 거점'이다. 가나자와구의 침체된 상점가에 있던 빈 점포를 커뮤니티 허브로 재탄생시킨 공간이다. 이곳은 주민에게는 쉼터, 학생들에게는 놀이와 학습 공간으로 제공되며, 다양한 세대가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되었다. 나미끼 거점은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지역 현장에서 인턴십을 수행하며, 마을 조사, 상권 활성화, 정책 제안 등 실천적 학습을 경험했다. 교수와 학생은 지역의 빈집, 상권 쇠퇴, 고령화 문제를 연구하고,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연결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대학의 연구와 교육이 지역 현장의 문제 해결과 직결되는 구조가 마

련된 것이다.

또한 요코하마대학은 도서관, 수영장, 다목적홀 등 캠퍼스 시설을 시민에게 개방했다. 부족한 도시 내 공공 인프라를 대학이 보완하며, 시민들의 여가, 학습, 건강 증진에 기여했다. 대학이 지역사회의 중요한 자원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이러한 지역 연계 활동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시와 대학의 긴밀한 협력 구조가 있다. 양측은 조직 내에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대학-도시 파트너십 협의회'를 구성해 기업과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실행 기구를 운영했다. 이를 통해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고, 주요 의사결정의 실효성을 높였다. 대학과 시, 기업, 시민이 함께 지역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구조가 정착된 것이다.

요코하마 사례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도시 위기 속에서 대학과 지역사회가 어떻게 연대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시민들은 삶의 질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을 경험했고, 지역 청년들은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갖는 계기를 마련했다. 대학의 참여로 지역사회가 재생되고, 주민들은 새로운 활력을 얻었다.

이처럼 지역의 문제를 지역 대학과 주민이 함께 해결해 나간다는 점에서 요코하마 모델은 일본을 넘어 한국 사회에도 큰 시사점을 제공한다. 인구 감소, 고령화, 지역 침체 등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는 한국의 도시들에게도 요코하마의 경험은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안적 모델 중의 하나이다.

기고



김 동 구

광주소상공인자영업자총연합회 공동대표

광주시의 대규모 복합쇼핑몰 입점과 도시 개발 정책이 지역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광주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의 타운홀 미팅에서도 지역 현안이 다뤄졌지만, 준비 부족과 소통 부재로 시민들의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이 시점에서 광주시는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들을 재검토하고, 무엇보다 소상공인의 고통을 뼈저리게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광주에는 더현대 광주점, 어등산 스타필드, 광주신세계백화점 확장 등 3개의 대형 복합쇼핑몰이 입점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소상공인 보호 대책이나 상생 정책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광주지역 소상공인은 약 17만 명으로 전체 자영업자의 93%를 차지한다. 이들은 대부분 전통시장, 골목상권, 동네 상점 등에서 활동하며 지역경제를

지역 소상공인의 절규, 외면하면 안된다

떠받치는 실질적인 주체다. 그러나 대형 쇼핑몰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이들의 생존 기반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광주의 인구는 2020년 이후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25년 기준 광주광역시 인구는 약 139만 명으로 3년 전보다 약 3만 명이 줄었다. 청년층의 광주 이탈도 심각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에만 약 7천 명의 20~30대 청년이 일자리 등을 이유로 수도권 등 외지로 유출됐다. 이러한 현실에서 복합쇼핑몰이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인구 유입을 이끌 것이라는 주장은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한편, 복합쇼핑몰 입점과 맞물려 추진 중인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도 교통문제 해결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운암동, 용봉동, 매곡동, 신안동, 임동 등 광주 서북구 권역은 평일·주말을 가리지 않고 극심한 교통정체를 겪고 있으며, 더현대 입점 이후 서광주IC를 중심으로 교통체증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고속도로 확장은 단순한 도로 확충이 아닌, 복합쇼핑몰과 연계한 교통체계 개편 차원에서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반면, 전북 익산시는 코스트코 입점을 통해 광주·전남 소비자 수백만 명의 유입을 기대하며 광역상권 선전에 나서고 있다. 광주

는 이에 대한 대응 전략 없이 대규모 유통기업의 입점만 허용하고 있어 지역 소비자마저 외부로 유출될 위험이 크다.

광주의 복합쇼핑몰 입점이 지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단기적으로는 일자리와 소비 확대가 이뤄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역 내 소비 독점으로 자영업자의 연쇄 폐업이라는 부작용이 불가피하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대형마트나 복합쇼핑몰 입점 후 반경 1km 이내 전통시장 매출은 평균 3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지금이라도 복합쇼핑몰 3곳의 동시 입점 추진을 재검토하거나, 입점 시기를 분산하고 업종 및 운영 방식의 차별화를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지역 상권과의 연계 프로그램, 임대료 지원, 공동 마케팅 상생기금부 제정, 온누리상품권 사용 현실화 등 실효성 있는 다양한 상생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 이는 단순한 유통 정책이 아니라 지역 경제 생태계와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지금 광주시는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 대규모 유통시설만이 답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진정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소상공인과의 상생에서 출발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교묘해진 '노쇼 사기' 주의

최근 대학가에서 교직원들을 사칭해 대리 구매를 유도하거나 검수 명목의 비용을 요구하는 등 노쇼 사기 행각이 날로 교묘해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예방 요령을 알아두자. 먼저, 사전 결제 없이 절대로 대량 주문을 받지 말자. 갑자기 과거 거래 내역이 없는 자가 전화로 주문을 하려 한다면, 반드시 예약금을 받아야 한다. 이런저런 핑계나 사정을 둘러대며 내지 않는다면 절대 주문을 받아서는 안 된다.

또한 군부대나 기관 소속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확인해야 한다. 그 직원이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지, 직접 주문한 것이 맞는지 등 꼼꼼히 확인 후 주문을 받아야 한다.

경기 불황으로 어려운 경제 현실 속에서 소상공인을 두 번 울리는 신종 사기 노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알고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모름지기 예방이 최선의 방책이다. <이재복·고흥경찰서 대서파출소장>

社說

착공 앞둔 ‘더현대 광주’ 교통·상생 방안도 속도내야

현대백화점그룹의 '더현대 광주'가 10월 착공한다. 쇼핑을 넘어 예술과 문화, 자연, 역사를 즐기는 공간으로 2028년 상반기 문을 연다. 광주 도심에 들어서는 최초의 대규모 복합상업시설인 셈이다.

북구 임동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에 자리한 더현대 광주는 랜드마크로 뜬 '더현대 서울' 이상의 혁신을 선보인다. 광주시와 현대백화점은 시청에서 보고회를 열고 광주의 고유한 역사 문화적 가치와 더현대의 독창적 역량을 더한 철학과 전략을 소개했다. 실제로 1·2층은 19세기 유럽 도시를 모티브로 럭셔리한 스트리트 플로팅 가든으로 꾸며진다. 3·5층은 상업시설로는 처음 실내식물원을 도입하며 예술·전시·공연이 어우러지도록 구상할 예정이다. 6·7층은 한옥 형태의 지붕과 안마당을 활용한 설계로 400평의 유리천장을 통해 개방감을 극대화한다.

광주의 경제지도가 새로 그려지고 있다. 대단위 민간 개발사업이 분궤도에 올랐다. 현대백화점은 복합쇼핑몰 경쟁에서 신세계백화점보다 앞서게 됐다. 서구 광천동에는 신세계와 광천터미널 부지를 확장한 '더 그레이트 광주'가, 광산구 어등산관광단지엔 신세계프라퍼티의 '그랜

드 스타필드 광주'가 추진되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더 그레이트 관련 사전협상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광주시는 협의회를 통해 사업 계획 및 공공기여 등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착공 시기는 2026년 하반기를 목표로 했다.

한 발 먼저 '더현대 광주'가 국내외 고객이 함께 찾는 글로벌 명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해서 개점에 따른 일대의 교통 개선 대책에도 속도를 붙여야 하겠다. 더현대 서울의 1.5배로, 하루에 2만대가 통행할 것이란 분석이다. 관할 지자체인 북구가 조건부로 건축 허가를 내준 이유다. 혼란 최소화해 더 유념해야 한다. 그동안 제기된 소상공인 보호 역시 구체화해 제시해야 한다.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진단하고 모두 공감할 최적의 상생 방안을 도출해야 하는 것이다.

광주시의 바람대로 복합쇼핑몰이 도시이용 인구 3천만명 시대 실현에 기여해야 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일조해야 한다. 광주시는 줄곧 신속·투명·공정 3대 원칙 아래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돼 있다. 누구나 누리는 미래형 문화거점으로 역할하길 기대하고 있다.

광주 자치구 공익소송 지원 조례 홍보부터 제대로

광주 광산구는 2021년 공익소송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주민 고충을 해소하고 있다. 지금까지 송정 숲안에2차 아파트 보증사고, 첨단 중해마루힐 주차타워 상가 분양대금, 선운 해광상그릴라 근처저당 말소, 항공장에표시 등 부당이득금 등과 관련해 비용을 부담했다. 2023년 9월과 올해 4월 불법 등기 관련 국가배상 청구 지원 요청은 기각됐다.

공익소송 지원은 각종 법률 다툼에서 권리 보호와 구제를 위해 비용을 대는 게 목적이다. 조례에 따라 변호사 선임료 등 최대 1천만원이며, 대상은 당사자 뿐만 아니라 다수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사건, 중요한 사회적 이익이 달려있는데도 법적 권리로 인정받지 못한 사건 등으로 규정했다. 위원회를 구성해 대상과 금액을 심의, 결정하고 패소 시 상대방에서 물어야 하는 금액도 범위에 포함했다.

시민 입장에서야 매우 유용하다. 경제적인 약자가 소송 비용에 위축돼 재판 청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공공성이 강한 소송을 지원하고 전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범 모델이 되기에 충분한

것이다. 하지만 활성화 여부는 의문이다. 광주에서는 광산구를 시작으로 최근 서구까지 포함해 5개 자치구 모두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12월 조례를 제정한 남구, 2023년 7월과 9월에 시작한 북구와 동구 모두 신청 건수가 전무한 실정이다. 최대 4년이 되도록 단 한 건도 없었다니, 의아스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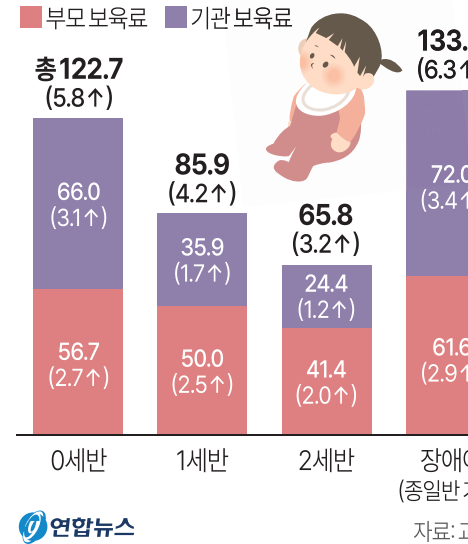
좋은 취지에도 묻히고 있다. 홍보 미흡이 먼저 지적되고 있다. 성의 있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으로 전시성 행정, 단체장의 치적용에 그쳤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경제·사회 위기가 깊어지면서 공적, 사적으로 이해가 얽힌 갈등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공공의 안녕에 반하는 경우라면 파장이 클텐데, 소송비 지원이 그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주민들이 제도를 몰라서 유명무실하다면 바로잡아야 한다. 홍보부터 강화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다. 애초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게 녹록지 않았던 만큼 더 주목받고 있다. 돈 때문에 재판을 못하고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 실효성을 확보할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공익소송 비용 지원제가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길 바란다.

그래픽 뉴스

어린이집 보육료 월 지원 단가

2025년 하반기 아동 1인당 지원액
(): 상반기 대비 인상액, 단위: 만 원



연말뉴스

교육부는 이달부터 정부가 주는 어린이집 0·2세 및 장애아 보육료 지원 단가가 이전 대비 5% 인상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지난 4월 국회에서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추경에는 0~2세 및 장애아 총 53만5천명에 대한 정부 지원 보육료 인상액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0·2세 영유아·장애아에 대한 부모 보육료는 0세반은 54만원에서 56만7천 원, 1세반은 47만5천원에서 50만원, 2세반은 39만4천원에서 41만4천원으로 각각 오른다. 장애아(종일반 기준)는 58만7천원에서 61만6천원으로 인상된다. 매달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조금인 기관 보육료(아동 1인당)도 0세반은 62만9천원에서 63만원, 1세반은 34만2천원에서 35만9천원, 2세반은 23만2천원에서 24만4천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장애아(종일반 기준)는 68만6천원에서 72만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2013년 3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전 계층 0~5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전액 무상으로 지원해 왔다. 부모 보육료는 국민행복카드(바우처)로 매달 지원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천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마케팅본부 경영지원부 사업본부 업무국	650-2099
	정치부	650-2030	사신부	650-2080		650-2070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650-2011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650-2007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刊)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